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신탁 출범

01 주요 내용

-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된 「공익신탁법」(15.3.19.시행)을 근거로 한 「제1호 공익신탁」 사업이 출범함

공익신탁 : 공익신탁이란 장학,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운용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의도한 공익사업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

- 「공익신탁법」은 기존 공익신탁 제도를 전면 재정비한 것으로,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췄으며, 일반 기부와 달리 목적을 특정할 수 있고, 법무부와 외부 감사인이 감독하므로 기부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함
- 공익신탁은 법인 설립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별도의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공익단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도 가능함
- 「공익신탁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목적사업은 16가지임
 - 장학, 아동·청소년이나 탈북자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근로자 생활 향상, 지역사회 발전, 소비자 권익 증진, 환경보호 등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업이 해당됨

공익신탁 명칭	지원대상
상처받은 아이 보듬는 법무가족 파랑새 공익신탁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
광복 70주년 나라사랑 공익신탁	독립유공자 후손
한비아의 세계시민학교 공익신탁	세계시민교육 참여자
난치성 질환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공익신탁	난치성 질환 어린이
법무부 천사 공익신탁	범죄피해자, 난민, 수용자가족 등

- 우리나라 법인 및 개인 기부금은 '06년 이후 각각 1.7배와 1.5배 증가하였으나, 그 규모는 2013년 기준 GDP의 0.87%로 미국(2.0%)이나 뉴질랜드(1.35%)의 절반 수준으로 이번 공익신탁을 통해 기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02 시사점

- 수탁자의 수월한 모금활동의 토대 마련
 - 법인 설립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모금에 소극적이었던 개인기관들의 적극적인 모금활동이 예상됨
- 기부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나눔 문화 활성화 기대
 - 공익신탁은 수탁자의 고유자산과 분별 관리되어 수탁자의 파산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여 위탁자의 의지대로 재산이 사용되는 장점이 있고,
 - 법무부 및 외부감사인을 통한 관리감독으로 투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기부문화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

자료 : 공익신탁 현황, 법무부 보도자료 (2015.7.23.)

자료 : 국세통계 연보,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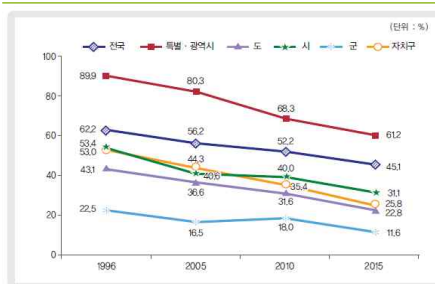
2. 국가 및 지방의 재정분담 개선

01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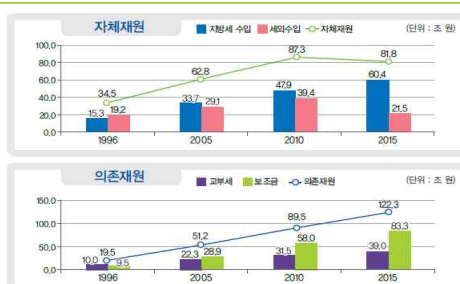
- 지자체 복지예산 중 매칭사업 비중이 2008년 85%에서 2013년 90%를 돌파
 - 일부 지자체에선 복지 예산 중 97%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가 복지사업의 매칭비용인 경우도 있음
-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살펴보면, 총 233.8조원 중 국고보조금이 83.3조원(35.6%), 지방세수입 60.4조원(25.8%), 교부세 39조원(16.6%), 세외수입 21.5조원(9.1%), 기타 29.7조원(12.7%)으로 대부분 의존재원임
- 실제 지난 20년간 지자체 세입원 중 의존재원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특히 보조금 증가율이 가장 높아 보조금 매칭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가중
 -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재원으로 복지사업이 가장 대표적
 -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복지사업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경기부진에 따른 지자체 자체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아 재정자립도는 점점 낮아지고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음
- 행정자치부의 「2015년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45.1%로 10년 전인 1996년(62.2%)에 비해 약 37.9% 낮아짐
 - 경기도는 60.7%로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경기도 자체는 49.9%(전국 도 평균 30.3%), 28개 시(市)의 평균은 43.9%(전국 시 평균 31.1%), 3개 군(郡) 평균은 19.7%(전국 군 평균 11.6%)로 높지 않은 수준



이미지 출처 : 동아일보



주 1) 재정자립도 : 자체재원(지방세수입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세입예산
 2) 당초예산 기준. 특별·광역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 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였음
 3) 2014년 이후 사망과목 개편으로 재정자립도에 포함되는 사망과목이 감소하였음



주 1)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 + 세외수입)을 말하며, 의존재원은 (보조금+교부세)를 말함
 2) 당초예산 기준. 일반회계+특별회계. 총계 기준임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각 연도 재정성

02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및 의존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복지사업 중 전국적 통일성 및 보편적 서비스 수준이 유지되는 사무의 국가 부담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전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국가가 80%를 부담(서울은 50%)
 - 기초연금은 국가부담비율 70% 원칙으로 하고 재정자립도에 따라 40%~90%까지 차등지원하고 있고, 무상보육은 65%에 불과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필요
- ※ 현재 주승용의원이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 하한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의안번호 15843, 2015.06.30.)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에너지 복지 정책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8%인 158만 가구 이상이 에너지구입비용으로 총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하는 '에너지빈곤층' 인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국비사업

사업명	내용
에너지바우처사업 (2015.7.1.시행)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총 1,058억원의 바우처 지급. 가구별 지급 규모는 3개월간 평균 10만6,000원이며 에너지바우처로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올 12월부터 3개월간 이용할 수 있음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올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 요금에 3구간과 같은 요금이 적용됨에 따라 월평균 전력을 366kWh 사용하는 4인 도시가구(647만가구)의 전기요금은 이 기간 매달 8,368원(14%)
취약계층 전력 효율화향상 사업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 LED 조명 교체지원에 국비와 지방비가 7:3 매칭으로 지원.

• 지자체 사업

지자체	사업내용
경기도	'2030 경기도 에너지 비전' 선포 전력자립도 70% 달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선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달성 등의 내용으로 비전을 선포.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도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에너지효율 혁신과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생산 혁신,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에너지 신산업 혁신을 채택하였음.
서울	에너지복지시민기금, 2020년까지 총 30억원 목표 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원전하나줄이기 등 에너지 절약으로 얻은 이익과 에코마일리지 포인트 등 후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최고의결기구인 '시민이사회'가 7월 15일 출범하였음 7월 현재 5,629만 2,010원을 모금했으며, 취약계층에게 LED 전등 교체, 단열 시공, 출입문 보수, 고효율보일러 교체, 미니태양광 설치 등에 사용 예정
광주광역시	'에너지복지협의체'를 구축하고 에너지 빈곤층 지원 협의체에 시와 자치구,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시민연대,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본부, LPG가스판매협회, 한국광해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해양도시가스 등 에너지 관련 17개 기관이 참여
충남	아산시, 복지사각지대 문제해소,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아산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아산지사와 업무협약 체결('15.7.15.). 가가호호 방문하는 협력기관 전기검침원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자체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경감 제도)실현을 위해 노력
경북	친서민 생활에너지 환경개선사업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가구에 노후 전기시설의 개·보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공사협회 경북도회, 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전기기술인협회, 경북동부·서부회 그리고 해당 시군이 재능기부 활동으로 추진 이외에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및 가스시설 개선,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노약자 이용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농어촌전기공급 사업 실시

03 FACT CHECK

직장 맘들을 위한 육아환경, 하반기에는 나아지나?

-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을 인상하고,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보장강화를 위해 지원금 지급방식도 변경하는 등 제도를 개선('14년 10월 관계부처 합동발표에 따른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육아휴직 허용에 대한 사업주 지원 제도>

구 분	기 준	달라지는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인상	• 대기업 10만원 • 중소기업 20만원	• 대기업 20만원 • 중소기업 30만원
육아휴직 등 사업주 사후지급비율 확대	• 복귀 1개월 후 50%, 6개월 후 50%	• 시작 1개월 후 1개월 치 지급,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지급
국가공공기관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폐지	• 월 10/20만원 지급	• 「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폐지
대기업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 인하	• 1인당 월 10만원	• 1인당 월 5만원
대체인력 지원 요건 완화 등	• 채용시점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 정액 지원	• 채용시점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 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 실 인건비를 한도로 타 지원금 수령 시 차액 지원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 비율 확대	• 6개월 경과 후 지급비율 15%	• 6개월 경과 후 지급비율 25%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근로시간(주당15~30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된 임금의 일부(통상임금6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정액의 지원금 지급

04 통계로 보는 복지

폭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기상 재해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기상재해 중 피해가 가장 큰 것은 폭염으로, 작년 한해 폭염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15,670명이며, 60세 이상 노년층은 4,447명으로 전체의 1/4을 차지함
- 폭염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6.1.~9.30일까지 전국적으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가 허약한 사람이 이용대상임
- 경기도 내 무더위 쉼터는 6,395곳으로 경로당,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이며, 지역별 쉼터 현황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시·군과 읍면동은 무더위쉼터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 등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사 방문강화 등 개별관리 및 지원 필요함

2014년 연령별 폭염 진료인원 (단위:명)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도 무더위 쉼터 현황



자료 :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